

'사랑의 매' 합부로 들면 큰일 나요

'자녀 체벌 금지'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훈육방식 변화 예고

부모가 훈육일지라도 자녀를 체벌하는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이제는 부모가 훈육이라는 이유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고,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훈육권이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부모는 훈육을 할 수 있으며, 그동안 체벌을 가해왔던 부모는 이제 다른 형태의 교육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그간 자녀에 대한 체벌의 법적 근거로 활용되고 있는 지적을 받아온 민법상 자녀 징계권이 삭제될 예정이다. 민법 제정 당시부터 존재했던 부모의 징계권이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 62년 만에 삭제=법무부는 '민법 제915조'에 규정된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민법 제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부모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법무부 역시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되고,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으로 이어

체벌권으로 잘못 인식된

'부모의 징계권' 62년만에 삭제 광주·전남 아동학대 年 3000건 아이 체벌 국민 인식 바뀔 듯

일부선 "훈육 어렵하나" 우려도

지고 있어 징계권 조항 삭제를 통해 체벌 금지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게 됐다. 징계권은 민법이 제정된 지난 1958년 이후 62년 만에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자녀에 대한 '필요한 징계' 부분을 삭제함으로써 자녀에 대한 체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밝혔다. 아동보호단체들도 '징계권'이 부모의 체벌을 법으로 허용하는 '체벌권'으로 잘못 해석되는 경우도 많으며 징계권 삭제를 줄곧 요구해 왔다.

초록우산재단 등 어린이보호재단은 지난 2019년부터 'Change 915,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라는 민법 915조 삭제를 요구하는 캠페인을 벌여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민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아동 권리가 중심이 되는 양육 환경 및 아동 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징계권 삭제의 의미=징계권은 아동학대를 저지른 부모의 방어 논리로 활용돼 오기도 했다. 또 부모라면 '내 자식을 한 두대 때리는 것쯤이야 훈육이다'며 사실상의 학대행위를 해왔던 일부 부모들의 훈육과 사고방식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1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2017년 3102건, 2018년 3172건, 2019년 3074건으로 매해 3000건이 넘는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신체적 학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해 광주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가운데 61%가 신체적학대(중복학대 포함)였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2018 아동학대 주 요통계에 따르면 아동 신체학대의 가해자 80.9%가 부모로 나타났다.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임에도 징계권을 이유로 학대피해 아동들은 오랜 기간 국가 감시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한선희 광주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은 "모든 체벌과 징계는 아동학대다"며 "부모는 체벌이 아닌 유아기부터 아이와 형성한 애착관계를 통해 서로 소통이 가능한 관계에서 긍정적인 훈육을 해야 한다. 앞으로 긍정적인 훈육에 대한 교육과 연구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도 징계권 삭제에 대해 대부분 '찬성'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징계권이 체벌을 정당화하는 의미로 비치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민주시민을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장 김정희 변호사는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징계권이 삭제되는 방향에 찬성한다"면서 "아동 체벌 자체에 관한 국민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징계권 삭제가 부모의 훈육권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법률사무소 인의'의 김경은 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들이 각종 특별법으로 다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수준의 필요한 체벌 즉 '사랑의 매'조차도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자녀의 훈육에 역효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다"면서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훈육한다는 이유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학대를 방지하는 데에는 기여할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훈육을 위해 체벌을 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자체도 개선이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강행욱 법률사무소'의 강행욱 변호사는 "민법은 자녀에 대한 관리·감독의 부족으로 자녀가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부모의 훈육권까지 부정한다면 이는 민법의 전체적인 틀과는 맞지 않는다"면서 "징계권의 삭제가 부모의 훈육권 부인으로부터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마약 청정지역' 이라던 광주 올들어 마약사범 8배나 급증

'마약 청정지역'을 자부했던 광주지역에 마약이 다시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구매 등이 급증하면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국민의힘-경남 창원시 의창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광주에서 검거된 인터넷 마약류 사범 검거 인원은 총 23명이었다.

광주에서 지난해 인터넷 마약류 사범으로 검거된 인원(3명)에 비해 무려 566% 증가한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증가폭이 크다. 광주에서 마약을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추세라면 또 다시 최고치를 갱신할 전망이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지난해 대비 올해 인터넷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마약사범이 증가한 곳은 광주를 포함해 부산(132%증가), 대전(73%), 충북(300%), 충남

(200%) 등 5곳 뿐이다.

광주에서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인원은 6명(2015년)→3명(2016)→0명(2017·2018)→3명(2019)로 전국에서 하위권을 유지하면서 청정지역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올해 광주지역은 인터넷 등을 떠도는 마약관련 광고 문구 등을 이용한 마약사범들이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8위를 차지하면서 대폭 증가했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등에는 "순도 높은 품질, 반가부터(사서) 및 보신 후 추가 구매 가능" 등이라는 마약관련 광고 문구를 쉽사리 접할 수 있다.

박완수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거래는 이를 단기간에 광범위하게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사당국이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

광주 지역 임금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발표한 '2020 광주시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임금 노동자는 58만7125명으로 이 가운데 38.4%인 22만5307명은 비정규직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과 제주, 울산에 이어 작은 규모였으며 규모가 비슷한 대전의 경우 광주와 비슷한 24만여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21만8220명, 2017년 23만4370명으로 점증했다가 2018년 21만8천801명으로 감소한 뒤 지난해 다소 늘었다.

광주 비정규직 노동자 가운데 일용직이 10만37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임시직 7만3737명, 계약직·시간제 4만7826명이었다.

산업별로는 임금노동자 수가 3만명 이상인 산업 중에서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정규직 비율(75.6%)이 가장 높았다.

건설업(46.5%)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43.1%), 도소매업(35.8%), 교육서비스업(35.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31.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광주의 경우 정규직 임금은 319만6000원, 비정규직 151만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각각 11만4000원, 24만7000원 적었다. 지난해 전국 임금노동자 월평균 임금은 266만4천원으로 정규직은 330만1천원, 비정규직은 175만8천원이었다.

6대 광역시 중에서 가장 낮은 임금 수준으로 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조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 보이스피싱 피해자 전 연령층 걸쳐 증가

전국적인 보이스피싱 범죄 증가세에도 20~30대 보이스피싱 피해자만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광주는 전 연령층에 걸쳐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 7667건으로 2018년(3만 4132건)에 견줘 14% 증가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70대 이상은 625건→1065건, 60대

는 3389건→4617건, 50대는 9313건→1만 1825건, 40대는 9842건→1만 2644건으로 증가했다. 반면 20대 이하와 30대는 각각 3855건과 6041건으로 2018년에 비해 625건, 442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광주지역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2018년 205명에서 2019년 358명으로 증가했는데 연령별 피해자를 살펴보면 20대 이하 32명→42명, 30대 39명→60명, 40대 57명→106명, 50대 45명→101명, 60대 27명→43명, 70대 이상 5명→6명이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추석 농축산물 부정 유통

광주·전남 업체 45곳 적발

외국산 밀가루를 이용해 한국을 만드는 등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추석연휴 농축산물 부정유통 업체 45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추석기간 농축산물 부정유통 일체 단속을 실시해 45개 업체를 적발하고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

전남의 한 한과업체는 외국산 밀가루로 만든 약과를 유과, 산자, 편강, 약과 등 한과세트에 포장한 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뒤 2.1kg, 96만원을 부정유통했다.

광주의 한 떡집은 외국산 쌀로 만든 떡 10kg을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해 4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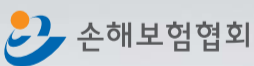
단속 업체 중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4개 업체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표시를 하지 않은 1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174만원을 부과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4·16진실버스' 진상규명 촉구

세월호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전국을 순회하고 있는 4·16진실버스가 14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정부의 성역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